

수돗물 아껴쓰면 요금 감면... ‘가뭄 장기화’에 광주시 ‘교육지책’

마른 장마·마른 태풍으로 10년새 저수율 최저...내년 3월 이후 물 공급 끊길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줄인 만큼 감면...이번 달 요금 부과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뭄의 장기화로 30년 만의 제한급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 속 광주시가 시민들의 수돗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1일 수돗물 사용량은 52만 t 가량이다. 수돗물은 동북

강(42%)과 주암댐(58%)의 원수를 정수해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가뭄으로 주 상수원 중 하나인 동북댐의 저수율이 32.4%(지난 1일



새 옷 입은 영랑생가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立冬)인 지난 7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동마을 모란(牡丹) 시인오로 잘 알려진 영랑 김윤식 생가(국가 중요민속문화재 252호) 초가지붕이 벗질으로 만든 이엉으로 새 옷을 입고 있다.

기준)에 그치고 있다. 저수용량은 3095만t. 하루 취수량(22만1000m³)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40일 정도만 물 공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가뭄이 지속한다면 내년 3월 이후에는 물 공급이 끊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동북호 저수율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난간 직후인 지난 9월 14일 45.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달 6일 결국 40% 미만으로 내려앉았다. 한달 새 30%대 마저 위협받고 있다.

주암호도 1억4900만m³으로, 저수율 32.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암호 역시 수돗물 공급 가능일수가 200일 미만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마른 장마와 마른 태풍으로 두 곳 모두 저수율이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상태로, 가뭄 위기관리단계가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겨울가뭄까지 지속할 경우 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156일 동안 제한급수가 실시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제한급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광주시는 내년 장마시작 예상 시점인 6월 15일까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노력으로 1일 사용량의 20%인 일 10만t의 절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절감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돗물 사용량을 줄인 만큼의 요금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절감량의 10%까지는 해당 금액 전체를 감면한다. 그 이상은 일정 비율을 적용,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절감량의 최대 40%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이번 달 사용 금액이 부과되는 내년 1월부터 감면 시행을 시행할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

우선, 수돗물 소비량이 월 1만 이상인 다량 급수처를 대상으로 물 절약 실적을 집중관리하고, 각 자치구와 손잡고 노후수도 계량기를 교체하고 꼼꼼한 누수탐사를 통해 땅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지하수 개발에 나서서 한편 빗물저금통 등 자연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작은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절수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라며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절감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관심 떨어진 코로나 백신...“요양병원·시설 예약율 6%대”

“고위험군 스스로 면역 만들어 보호해야”
 고령층 예약률 10.9%...요양병원 등 6.6%

정기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코로나19 7차 유행을 앞두고 모든 고위험군이 접종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고위험군은 (동절기 개량백신을) 다 맞아야 한다”며 “지금 같이 전파력이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10이 넘는 경우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제는 고위험군인 사람들이 스스로 면역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2.7%, 대상자 대비 3% 수준이다. 예약률은 전체 인구 대비 3.7%, 대상자 중에서는 4.1%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률은 8.3%, 예약률은 10.9% 수준이다. 60세 미만 성인의 경우 접종률은 0.2%, 예약률은 0.5%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중증화 위험이 높지만 접종률은 높지 않다. 지난 2일 기준 요양병원·시설의 동절기 접종 예약률은 6.6%, 접종률은 5%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걱정된다”며 “아직까지 본격적인 접종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다고 보지만 예

약을 낮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맞아도 걸린다”거나 ‘병독성이) 이제는 많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고위험군에서는 치명률이 다르다. 나이대별로 치명률이 높아지고 특히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은 집단감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지자체에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더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꼴로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승호기자

광주경찰청,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 ‘엄정 대응’

광주경찰청이 교통사고를 낸 뒤 사상자 구호 등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내기도 구호·2차 사고 예방 등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달아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투약·무면허·동종전과 등 도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용의 차량을 곧바로 추적하고, 차량 번호를 특정해 운전자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잠적한 경우에도 폐쇄회로(CC)TV 분석,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빠르게 운전자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도주 원인으로 음주·약물 투여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사고 전후 운전자의 행적을 면밀하게 살핀다. 음주대사체(음주 직후 소변에서 검출되는 신체 대사 부산물) 검사 등 기법을 동원해 음주 여부도 가려낸다.

경찰은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를 하지 않고 달아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 3항이 적용돼 강력 처벌 받는다고 엄중 경고했다. 오유나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권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